

남북한 통합 논의의 이념적 자원*

이
홍
림 | 서울대 정치학과

상이한 체제이념을 토대로 하는 남북한의 통합은 정치적 '정당성', 경제적 '이익의 통합' 과 '새로운 정체성의 수립' 등을 내포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함과 더불어 이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조화를 가능케 하는 정치, 사회적 기제의 수립이 동시에 요구된다. '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의미함에 비해, '통일'은 주권의 단일화를 전제로 이념과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의 공유를 달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차원과 단계를 포함하는 '과정으로서의 통합'은 '통일'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 통합을 다양한 형태의 인적·제도적 교류와 협력,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정치통합으로서의 통일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보다 적실하고 탄력적인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통합을 위한 이념적 기반은 정치공동체의 통합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 본고는 남북한 정치통합을 위한 하나의 이념체계를 구상하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통합을 촉진하고 통일 체제를 형성함에 있어서 핵심 구성요소가 되어야 할 이념적 자원들을 최소주의적 규범론, 민족주의, 민주공화주의, 다문화주의 정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연합 구상을 실현가능한 통합 방안이라고 전제할 때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이념적 자원들이 무엇인가가 논의의 초점이다.

주제어: 남북한 통합, 최소주의적 규범론, 민족주의, 민주공화주의, 다문화주의 정치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 지원사업(기획과제: 북한의 체제변화, 대외관계 및 남북한 통합의 모색)의 도움을 받아 수행되었음.

I. 머리말

남북한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체제이념을 토대로 한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집단주의적 유일사상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연대성과 정치참여, 자치와 대표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 정치경제분야의 규범적 가치 비교연구(이종석 1998, 155-195)를 보면 남북한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치과정,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서로 매우 다르다. 한 예로 남북한 모두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남한은 개인 존중과 시민적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삼는데 비해, 북한은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 가치기준을 근간으로 사회적 일원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창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평화적 통합과정은 많은 난제들을 내포한다. '삶의 양식' 또는 가치관의 동화는 정치 및 경제 제도적 통합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특히 이념의 차원에서는 양극단을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의미함에 비해, '통일'은 남북간의 정치통합, 즉 주권의 단일화를 전제로 이념과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의 공유를 달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차원과 단계를 포함하는 '과정으로서의 통합'은 '통일'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 통합을 다양한 형태의 인적·제도적 교류와 협력,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정치통합으로서의 통일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보다 적실하고 탄력적인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남북한 통합은 단순히 '민족'에 대한 원초적 감정을 토대로 한 정서적 합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북한 통합은 정치권력의 '정당성', 경제적 '이익의 통합'과 '새로운 정체성의 수립' 등을 동시에 내포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함과 더불어 이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조화를 가능케 하는 정치, 사회적 기제의 수립이 동시에 요구된다(유홍림 20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이론적 기반은 정치공동체의 통합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남북한 정치통합을 위한 하나의 이념체계를 구상하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통합을 촉진하고 통일 체제를 형성함에

있어서 핵심 구성요소가 되어야 할 이념적 자원들을 선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즉,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연합 구상을 실현가능한 통합 방안이라고 전제할 때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이념적 자원들이 무엇인가가 논의의 초점이다.

II. 통합 논의의 방향

1960년대 북한의 통일론은 ‘남조선 혁명’을 ‘조국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남조선혁명론’을 기저로 한다. 1960년 북한은 연방제를 과도적 통일방안으로서 공식적으로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한 내부의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남조선혁명론이 대남정책의 근간이었다(이종석 1998, 86-95). 이른바 ‘3대혁명역량 강화’는 ‘민중기지노선’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 제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 내 혁명정당 결성과 혁명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도들이 실패하게 되고, 미·중간의 화해시대가 열리면서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남정책을 수정하기에 이른다. 북한의 통일노선의 변화는 1972년 7·4공동성명과 1973년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 포함된 ‘조국통일 5대강령’을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한 7·4공동성명은 남북한 정부간의 공식적 채널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논의의 장을 열었고, ‘5대강령’은 ‘남조선혁명론’을 대체하는 종합적 통일정책노선의 기본강령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1980년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에서 과도적 형태의 연방제가 아닌 최종 목표로서의 연방공화국을 제시했다.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방안이 갖는 궁극적인 문제, 즉 일원화된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체제 선택을 둘러싼 불가피한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남북한 체제의 상이성을 인정하고 지역자치제를 통해 어느 정도 항구적인 공존을 가능케 하는 정치통합의 형태로서 연방공화국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탈냉전의 상황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국가연합적 방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이종석 1998, 107). 즉, ‘정치적 결단’에 의거한 통일방안보다는 평화 정착과 북한체제 보장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중요시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탈냉전 상황의 전개와 함께 남한의 통일정책은 적대적 대결구도에서 탈피하여 화해와 공존, 그리고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탈냉전기 한국 정부가 제시한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국가연합에 기초한 점진적 통일방안이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과도적 국가연합에 기초한 대표적인 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한 간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준비단계를 거친 이후 남북한 국가연합을 달성하고, 이 남북연합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단일한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체제 우위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이 통일방안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통일의 최종형태로 설정했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 남북한 통합에 대한 학술적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 남북한 정치통합 연구의 현저한 특징은 북한 붕괴가능성을 전제로 한 흡수통일논의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이종석 1998, 218-223). 아울러 국가연합 논의가 보다 정교한 형태로 이루어졌고, 통일 비용과 관련하여 실용주의적 접근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일이후의 국가체제나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 기반은 기능주의, 연방제, 수렴이론, 그리고 기능주의에 정치적 요소를 결합한 신기능주의 등이다.

2000년 6·15 이후 통합논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평화담론'의 확산이다.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¹⁾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통일 논의보다는 남북한 화해협력의 제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평화연구와 평화담론은 안보담론처럼 갈등과 폭력의 실재를 인정하지만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안보담론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구갑우 2007, 27)." 이러한 평화담론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1) 현실주의적 안보담론과 권력정치에 기초한 균형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한반도 차원에서의 '평화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이론적 노력에 대해서는 구갑우(200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과 과정에 대해서는 박종철(2000), 조성렬(2005), 조민(2005) 등 참조.

다른 한편 체제의 상이성을 전제로 발전적인 수렴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도 활성화되었다. 이른바 남북한 체제수렴론은 남북한 양 체제의 실질적 개혁을 전제로 한 통합론으로서 학계 및 공적 담론의 장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은 극단적인 스탈린주의적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유화 및 민주화를 달성해야 하며, 남한의 경우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평등주의적 개혁을 통해 남북한 정치경제체제의 통합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수렴론적 통합전략이다. 수렴론에 근거하여 제시된 대표적인 통일모형은 민주사회주의이다(임현진 외 2005, 145-177). 민주사회주의적 통합론에 의하면 민주사회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원칙(다원주의적 정치질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가정, 인류 보편적 가치 옹호, 국제적 연대 추구 등)과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계획과 자원의 조화, 혼합경제 모델, 개인의 경제활동 보장, 노사협력 등)를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사회주의를 남북한 통합 모델로 상정하는 경우 남한은 정치민주화를 더욱 성숙시켜 평등주의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자본주의적 발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시장경제 수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의 폐쇄적인 통치 이데올로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인간 생활의 기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개혁 노력이 요구된다. 즉,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완화시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다원주의적 정치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개방경제로의 전환과 시장의 도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남북한이 변화되어 간다면 통일한국은 민주사회주의의 정치·경제원칙과 이념이 실현된 형태로 그려질 것이다. 물론 수렴론에 근거한 민주사회주의 통일론은 양 체제의 바람직한 변화 가능성, 그리고 민주사회주의 원칙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다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의 전망과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민주사회주의의 구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남북한 체제개혁의 구체적 방안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로드맵 구상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방안 모색, 나아가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체제수렴을 구상하는 노력 등 현 단계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의도와는 달리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상황가변성과 복잡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계론적이

고 정치공학적인 발상은 통합의 필수요건이자 토대인 상호신뢰 구축을 오히려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통합은 '미래를 설계하는' 이론적 추상화 또는 지나치게 전략적인 계산보다는 '현실 상황에 내재하는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실천적 지혜와 판단에 의해 진전될 수 있다.

III. 통합 논의의 이념적 자원

1. 최소주의적 규범론: 기본권의 정당화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연합 구상을 중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통합의 방안으로 전제한다면 그에 필요한 이념적 자원들은 무엇일까? 공통의 사회문화적 의식이 와해되었거나 정치경제적 규범을 둘러싼 갈등과 차이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통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적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상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른바 최소주의적 담론전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안들을 둘러싼 갈등의 극단화를 막기 위해 추상적이고 원리적인 차원에서의 합의를 지향한다. 통일 방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본 전제 또는 최소원리가 되어야 할 이념적 조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어떠한 통일방안(단계론 또는 일괄타결,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1민족 1국가 또는 1민족 2체제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자주, 평화, 민주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념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적 정치문화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이한 가치관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최소주의적 규범의 구성과 수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롤즈(John Rawls)의 '만민법(the law of peoples)'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롤즈는 만민법을 "국제법과 그 관행의 원리와 규범에 적용되는 올바름과 정의에 관한 정치적 관념"이라고 규정한다(Rawls 1999, 3). 『정의론(1971)』과 『정치적 자유주의(1993)』에서 제시된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로부터 만민법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롤즈의 시도는 정치적 구성주의에 의존하여 전개된다.

롤즈의 만민법에 대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현대세계에서 기본권의 보편성을 이론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롤즈에게 있어 인권은,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 도덕적 인격체라든지 혹은 인간은 천부적인 도덕적·지적 능력에 따른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등의 포괄적인 도덕적 원리나 인간 본성에 관한 철학적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다. 철학적 관념이나 이론이 전제되는 경우 인권은 서구의 정치적 전통의 산물로 이해되어 비판과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롤즈는 기본적 인권이란 정의로운 국제 정치사회의 정규 구성원이 되는 모든 국가들이 질서정연한 정치적 제도들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면에서 인권은 합당한 만민법을 구성함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특별한 종류의 권리들이다. 즉, 인권은 합당한 만민법의 구성 부분이며, 만민법에 따라 모든 국가들에 요구되는 국내 제도의 형태를 규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한 사회가 정의로운 국제사회의 정당한 자격을 얻기 위한 외적 경계를 의미한다.

한 국가 내에서 시민의 기본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롤즈는 주장한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보편적 규범의 모습은 만민법의 구성을 통해 드러난다. 만민법과 구별되는 국제법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들을 결여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의 실정법적 질서이다. 이에 비해 만민법은 국제법으로 확장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자유주의적 정의의 관념들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올바름, 정의 그리고 공동선과 같은 정치적 관념들을 말한다. 따라서 만민법은 국제법을 평가할 수 있는 개념과 원리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만민법은 자유주의적인 정의 관념에 기초하지만 질서정연한(well-ordered) 비자유주의적 사회에서도 수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는 평화를 애호하며 팽창주의적이지 않은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의 법체계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정당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결과로 기본적인 인권들을 존중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비자유주의적인 사회를 롤즈는 '질서정연한 위계사회' 라고 칭한다. 만민법의 도출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자유주의적 사회들과 위계적 사회들이 일치하여 만민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사회 모두 세계의 정의로운 국가들로 구성된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의 정규의 구성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롤즈는 만민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떤 사회가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를 존중한다고 할 때 그 사회가 반

드시 서구적인 자유주의사회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논증하려 한다. 즉, 자유주의적인 사회와 위계적인 사회들이 동일한 만민법에 동의할 수 있으며, 그 만민법은 서구적 전통의 특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자유주의적 정의 관념은 폐쇄적이며 자족적인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상정하면서 포괄적 교의가 아닌 형태로 제시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정의 관념이 국제사회 속에서 어떻게 합당한 만민법으로 확장되어 재구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성주의적 이론의 권위는 실천이성의 원리들과 관념들에 기초한다. 롤즈는 우선 일정한 조건들 — 공정으로서의 정의 — 을 충족시키는 질서정연한 자유주의적 국가들로부터 시작한다. 국내적인 차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리들이 도출되는 구성의 과정에서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과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은 대표성, 합리성, 대칭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 개념들이다.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념이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장되는 단계에서도 원초적 입장은 중요하다. 이 경우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 관념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사회들의 대표들로서 모든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평한 조건과 만민법을 규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서도 원초적 입장은 대표의 장치로 기능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국가들이 합당한 조건에 놓여 있으며, 각기 합당한 근거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들로 상정된다. 민주적 국가들의 대표자로서의 당사자들은 서로 대등하며, 따라서 각 국가들을 합당하게 대표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국내의 자유주의적 정의의 원칙들에 따라, 혹은 그것을 전제하여, 민주적 사회들의 근본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만민법을 위한 여러 원칙들을 숙고하도록 기대된다. 그리고 각 당사자는 무지의 장막에 가리어져 있다. 즉, 당사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그들의 경제발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타 그와 연관된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국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들을 규명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로 수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조건 하에 합의되는 정의의 원칙들 중 하나가 “각 국가들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롤즈는 자유주의적 국가들 사이에 합의될 수 있는 만민법은 질서정연한 위계적 사회의 대표자들에 의해서도 채택될 수 있다고 본다. 위계적 사회들은 ‘공동선의

로서의 정의(justice-as-common-good)'의 관념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들이 질서정연한 사회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은 제도적 차원에서 법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대의적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은 바로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다. 롤즈에 따르면 합당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만민법은 위계적 사회에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의 과정에서 원초적 입장은 자유주의적 사회들 간의 합의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원초적 입장에서는 각 국가의 대표자로서의 당사자들은 상호 동등한 조건 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각 당사자는 — 그가 대표하는 사회 내에서는 기본적 불평등이 허용되지만 —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평등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는다. 설사 한 사회에 기본적인 평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그 사회가 다른 사회들에 대한 권리의 주장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자유주의적 사회의 대표들도 원초적 입장에서 '평등한 자유(equal liberty)'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롤즈가 강조하는 근본적인 논점은 『정의론』에서와 같이 한 정치사회 내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도출되는 것과 정의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자유주의적 관념으로부터 만민법이 도출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합당한 구성의 절차라는 근본적 이념을 사용하여 상호 공정한 조건을 공유하는 합리적 행위자들이 각각의 주제, 즉 개별적인 국내의 기본 구조(제도)이든 또는 공통된 만민법이든, 그 주제들에 대한 정의의 원리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 모두의 경우 그들이 원초적 입장의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동기는 '평화적인 질서와 안정'이라는 정치적 관심에서 발견된다.

2. 민족주의: 통합의 규범적 정당화와 신뢰 구축의 기반

남북한 통합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와 논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념은 단연 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 분단 현실에 대한 이론적 규명을 시도하는 분단체제론, 분단구조론, 결손국가론 등의 논의 모두는 한반도에서의 근대 국민(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통일 이후의 정치이념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민족주의는 차이를 넘어선 통합과 미래

지향적 발전의 이데올로기로서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각 사회의 특수한 역사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복합적인 이념으로서 다양한 논의의 주제들을 내포한다.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국민주권의 수립을 통한 대내적 민주화, 그리고 자주독립과 민족자결권에 의한 대외적 주권성의 확립을 추구하는 근대적 이념으로 이해된다. 근대 서구의 민족주의는 근대 국가의 형성과정을 촉진시킨 강력한 정치이념으로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낭만주의, 사회주의, 국가주의 등의 이념들과 친화 및 긴장의 관계를 가지면서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어왔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민족주의는 자유민주주의적 원리(개인주의, 인민주권, 입헌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자유주의적/공화주의적) 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난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와 혈연, 언어, 유기체론적 집단주의 등이 강조되는 '문화적 또는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의 전개를 볼 수 있다. 물론 19세기 후반 이후 서구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는 이념으로서도 기능하였다.

한국 민족주의는 그 발생양식에 있어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저항과 함께 근대성에 대한 내재적인 자각의 과정도 포함한다. 한국 민족주의의 사상과 실천은 한편으로 한말에 이르러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외압이 계기가 되어 등장하였다(김영작 1989). 위정척사 사상은 한국 민족주의의 저항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일제 강점 이후의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운동들은 기본적으로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 민족주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각성과 역량 축적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생·전개된 측면도 간과될 수 없다(김혜승 1997). 실학파의 민족주의적 개혁 사상, 대원군의 내정개혁정책,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의 개혁정치 등은 변화하는 국제세력관계 속에서 민족의 자결권을 확보하고 민족의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려 했던 주체적 노력이었다.

외세와 외압에 대응하기 위한 위정척사론과 개화파의 현실주의, 밑으로부터의 반봉건운동을 주도한 동학사상, 갑오개혁, 계몽운동, 무력항쟁 등은 모두 위기에 처한 민족자결권을 수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저항의 표출이다(신용하 1987). 일제의 강점 이후 문화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은 국내에서의 실력양성운동과 해외에서의 무력항쟁 기지의 건설 노력으로 전환되어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명무실한 대한제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이념으로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

다. 1919년 3·1운동은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다양한 운동세력이 결집된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민족운동 내부에서 공화주의가 대안적인 정치이념으로 위상을 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3·1운동 이후 국내외 민족운동세력들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임시정부의 수립은 그 대안의 하나였다. 또한 사회주의 사상이 국내외적으로 수용되고 유포됨에 따라 민족운동의 분화가 나타났다. 민족운동세력은 각자의 대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사상적 대안을 마련하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간의 결합이 신간회 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하였지만, 통합된 항일 운동의 시도가 실패한 이후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전반적으로 저항과 도덕적 분노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윤리적 실체로서의 민족의 정치적 자결권과 자긍심에 대한 강한 열정이 바탕이 된 한국의 민족주의는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 민족주의의 권위와 도덕성은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이라는 과제의 절대성에 의해 확고하게 인정되었고, 여타의 근대적 사상 조류들은 민족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수용되고 나아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방 후 민족주의는 강력한 국가적 동원 이데올로기로 기능했으며,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반체제적 저항운동, 분단극복과 통일운동 등은 모두 민족주의적 열정과 권위에 의존하여 추진되었다.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의 강한 영향력과 생명력은 반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등의 근대적 사상의 정립과 제도화에 장애가 되었다. 물론 민족주의는 국민주권이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Yack 2001). 그러나 ‘절차화된’ 국민주권은 합리적 의사형성 구조의 확립에 의존하며, 민족주의가 집단주의적인 동원과 운동의 이데올로기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분단 이후 남한에서는 민족주의의 의미와 역할이 주로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온 데 비해 북한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주체사상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왔다. 1950년대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국제주의적 계급이익에 배치되는 부르주아 사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북한지도부는 대외적으로 강한 민족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민족주의 담론을 사회주의와 접목시키려 했다. 그 결과 민족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정의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주창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인식은 1980년대에 이르러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고, 1986년 후계자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제창하면서 인식의 일대 전환이 초래되었다(이종석 2000, 190-195).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강조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민족주의 자체를 부정하던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참다운 민족주의'를 통치이데올로기의 구성요소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의해 민족과 민족주의 담론이 북한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우리식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건설과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결합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북한에 대한 위협상황이 존재한다(이종석 2000, 198-199). 즉, 북한지도부가 몰락한 사회주의국가와 북한을 차별화하기 위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전략적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조선민족제일주의'의 한계는 '조선민족'이 '북한인민'만을 의미한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주체형의 사회주의민족'에 국한된 민족제일주의는 북한의 대내적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의 민족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의 민족주의는 분단 극복을 지상과제로 한다. 민족주의는 남북한 통합을 정당화하고 촉진시키는 이념으로서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통합은 단순히 '민족'에 대한 원초적 감정을 토대로 한 정서적 합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합은 정치권력의 '정당성', 경제적 '이익의 통합'과 '집단적 정체성의 수립' 등을 동시에 내포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²⁾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함과 더불어 이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조화를 가능케 하는 정치, 사회적 기제의 수립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³⁾ 민족공동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과 확인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라는 근대 민주주의의 사회적 동원체제와 이념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 즉, 근대적 상황에서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정체성 확인은 자유민주주

2) 남북한 통합의 다차원성과 복합성에 대한 논의는 이정복 외(2000) 참조.

3) 김동성(1995, 31-36), Motyl(2001), Hutchinson(2000) 참조.

의의 기초인 정치공동체의 '민주적 정당화'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남북한 통합의 문제는 '정치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로 되는 사회통합의 문제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민족'의 형성 자체도 정치적 과정과 운동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씨족, 부족의 단위를 초월해서 형성되는 민족은 그 시원으로 보면 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혈연에 의존한다. 그러나 혈연의 계보가 확장되는 과정은 자연적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이질성과 부족주의의 극복을 위한 집단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을 내포하는 과정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치적 이상은 '동질성의 유대에 기초한 공동체'이다. 이러한 '윤리적 실체'로서의 공동체 이상은 문화적 동질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는 개인적 이익을 지양하는 공공선 우선의 원리로 나타난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는 내적인 다양성과 이질성을 특징으로 한다. 혈연과 인종적 특성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에서 동질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극단적인 인종적 민족주의에서 상정하는 동질성은 단적으로 비역사적인 주장이다.

낭만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통합의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성찰과 구체적 방안 모색에 많은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민족주의적 관점은 남북한 통합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데 강점을 가질 수 있지만, 현대 사회 일반이 당면한 과제들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현대사회는 정서적 통합뿐만 아니라 '이익의 통합'을 추구한다. 따라서 다양한 요구와 갈등적인 이해관계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기제를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성찰이 필요하다.

통합의 문제는 '정서적 유대'와 '합리적 정당성'의 문제를 동시에 내포한다. 하나의 공동체가 통합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적 기초와 인위적 노력이 요구된다. 인종적 계보와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은 신화, 종교, 생활세계 내에서의 관습 등을 통해 형성되고 계승된다. 근대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보면 탈신화화된 개인주의적 무정부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동질성과 유대의 근원을 추적하고자 하는 노력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는 과거의 낭만주의적 이상에 의해 통합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크며 복잡한 정치적 단위이다. 근대 국민국가는 과거 동질성의 기초가 되는 위계적 질서를 부

정하는 민주주의와 평등한 경제적 복지, 대외적 주권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통합의 합리적 정당화가 중요하게 된다.

3. 민주공화주의: 체제 구성과 운영의 기본 원칙

남북한 통합의 이념을 모색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공동체주의와 결합하려는 시도, 나아가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를 체제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의 기저에는 남북한 체제수렴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념의 지평이 공화주의이다. 남북한 헌법은 모두 '공화국'을 정체로서 명시하고 있다. 물론 남한의 자유주의적 '민주공화국'과 북한의 사회주의적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공화주의의 스펙트럼에서 상이한 위상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형태의 정치통합, 나아가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경우 공화주의는 통합 논의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공화국은 "법(정의)과 공공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든 정치공동체"를 의미한다. 공화국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외세, 독재자, 부패이다. 공화주의의 이념은 "자유로운 인민은 법에 복종(obedience)하지만 타인에게 예속(servitude)되지는 않으며, 지도자는 두지만 주인(dominus)은 두지 않는다"는 루소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사적 주종관계(domination)의 부재를 출발점으로 한다. 이른바 *res publica*는 '인민 모두의 일'로서 *res privata*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요컨대 공화주의는 자유와 자치를 결합시키는 이론(Pettit 1997)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치를 이상으로 한다. 공화주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복합적 이념과 제도의 총체로서 공화국과 정치적 자유의 이념, 시민윤리(시민의 덕성, civic virtue)를 주축으로 한다. 공화주의 정치전통의 이상은 대내외적 '평화와 질서(*pax et concordia*)'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화주의 정치사상은 그러한 이상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발전해왔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담론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공화주의의 역사를 개관해보면 그 출발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폴리스 이상(*polis ideal*)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최초의 공화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Finer 1997, 316-368).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그리스 폴리스들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몰락 과정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윤리적 공동체로서의 폴리스는 시민의 덕과 우애를 기반으로 하고 혼합정부와 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이상을 제시했다. 이른바 고전적 공화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능력 함양, 정부구성에 있어서의 혼합원리, 그리고 법의 지배를 통해 민주적 '합의'와 귀족적 '지혜'의 결합을 추구했다. 또한 로마 공화정은 혼합정체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대외 팽창을 추구했다.

고전적 공화주의는 중세 말 이탈리아 북부 자치도시(*civitas libera*)들의 등장과 시민 인문주의자들의 노력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부활했다. 피렌체,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루카, 시에나 등의 자치도시들은 노예제가 없는 최초의 공화국들이었으나 시민권은 제한적이었다. 이 시기 자유(*libertas; libertà*) 개념은 정치외교의 전문용어로 확립되어 정치적 독립과 자치를 의미했으며, '평화와 조화(*pax et concordia*)'가 공화정의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이탈리아에서 부활된 공화주의는 17C 영국시민혁명시기 해링턴(*James Harrington*)에 의해 왕과 의회 간의 갈등이라는 영국적 맥락에서 법치와 대의제적 자치 옹호론으로 전개되었다. 18C 미국혁명은 '거대한 상업공화국(*large commercial republic*)' 실현이라는 새로운 실험의 장을 열었고, 연방주의, 권력분립, 대의제의 결합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공공선의 실현을 추구했다.

그러나 근대적 상황에서 공화주의 전통 내부의 자유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적 요소는 서로 분리되어 갈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적-대중주의적(*democratic-populist*)' 공화주의모델과 '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liberal-pluralist*)' 공화주의모델이 구분되기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화국을 실험하고 발전시켜 왔다. 근대 이후 나타난 공화국의 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이 되는 공화주의의 요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는 자유이다.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불간섭의 '소극적 자유'와 완전한 자율과 자치의 이상인 '적극적 자유'의 중간 형태인 '비지배(*non-domination*)'라 할 수 있다(*Skinner 1998; Pettit 1997, 6장*). 공화주의적 자유는 상호의존적인 개인들이 법치와 정치참여를 통해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참여는 인간 생활의 필수적 요건이다. 자치에의 참여는 공공선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동료시민들과의 토의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선택 능력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넘

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능력의 함양이 요구된다.

둘째로, 공화주의 정치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입헌주의와 권력분립, 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분권화, 그리고 대의제적 자치(representative self-government)를 근간으로 한다. '법의 제국(the empire of law)'이라는 공화주의의 상징은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지배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신념의 표현이다. 아울러 권력의 분산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서 다양한 수준의 공적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시민의 정치참여는 참여민주주의와 달리 제도와 절차에 기초한 공적 '토의과정'에의 참여(participation as deliberation)로 나타나며(Honohan 2002, 7장), 민주적 '합의'와 공공선의 관점에서의 '지혜'를 결합시키기 위해 대표 선출을 통한 자치의 구현을 지향한다.

셋째로, 공화주의는 시민덕성(시민윤리), 즉 시민의 자질과 역량에 기초한다.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공화국이 법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사회 규범(nomos), 관습(mores), 관행, 상호신뢰, 준법정신, 정의감, 감시, 자기규제, 자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의무, 봉사정신 등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한 공화주의 이상은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공화주의에서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며, 나아가 시민종교로서의 애국심의 의의에 관심을 기울인다.⁴⁾ 공화주의 전통에서 발견되는 통찰력은 시민의 덕과 공공심, 나아가 공공영역으로서의 정치세계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만들어지는 인격으로서의 시민과 만들어지는 현실로서의 공공영역은 사회통합과 안정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공화주의는 법치주의를 토대로 한다. '법의 지배' 또는 '법치'(rule of law)를 현대 정치사회의 가장 중심적 원리로 이해할 때 남북한 통합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합리성과 정당성에 근거한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사회 통합'과 '정당성'의 관계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도 위기와 분단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재구성의 방향 및 과제와 관련하여 법치주의

4) 키케로(Cicero, *De officiis*)는 "공화국에 대한 사랑(*caritas republicae*)은 좋은 정치와 공적 삶에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인위적 감정으로서 *patria*, 즉 *res publica*에 의한 연대감은 *natio*에 의한 연대감보다 훨씬 강하며 고매하다"고 말한다.

확립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통합의 원천으로서 경제적 재화와 행정 권력의 합리적 운용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기본구조의 수립은 법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대 정치의 핵심은 '민주적 법치', 즉 민주주의적 정치과정과 '법에 의한 통치'의 결합이다. 이러한 결합은 정치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피치자이자 동시에 법의 제정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될 때 가능하다. 즉,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개념은 민주적 법치의 전제 조건이다. 입법과정 또는 사회계약과정의 참여에 의해 정치권력과 법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보장되며, 나아가 정치공동체의 개별 구성원과 전체 사이에 일종의 법적 유대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시민권(citizenship)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형태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법치는 '자신의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투쟁' 또는 '자신의 법을 전체의 법으로 전환시키려는 투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의 효력과 정당성의 확보는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된다. 즉, 법치가 민주주의적 정당성과 피리되어 사실성의 차원으로 환원되는 경우 법치의 이념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입헌 민주주의국가의 규범적 자기이해와 관련하여 정당한 법체계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실현되는 '사적 자율성'과 민주적 참여를 통해 보장되는 '공적 자율성'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법은 의사소통적 권력을 행정 권력으로 변환시키는 매개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경우 '법치 또는 입헌국가는 토의민주주의와 내적인 연관성을 갖는다'는 주장(Habermas 1996)은 설득력을 갖는다.

공동체적 유대는 우선적으로 공유하는 전통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형성되며, 사회의 응집력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기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적 유대만으로는 합리적 사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이해의 실현이 현실 사회 속에서 가능하고 실제로 보장되고 있다는 실질적 차원에서의 확신이 더불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들의 조화와 결합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이른바 '합리적 이해/합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합의를 보장하는 절차가 '합리적 논쟁'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입법과정의 전형적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입법과정의 합리화와 개방화는 입헌주의적 원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공화주의 전통이 갖는 유용성의 근거는 정치의 형식은 변화하지만 그 본질은 변

하지 않는다는 정치에 대한 순환적 이해와 시민덕성(시민윤리)은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하며, 따라서 공화주의는 새로운 정치적 유토피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Viroli 2002)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세계는 자유, 평등, 공동체적 유대, 개인성, 집단정체성, 복지, 민주적 정당성, 리더십 등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가치와 요건들을 내포한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들의 완전한 조화와 실현을 가능케 하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정치는 상충하는 가치와 요구들 간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이러한 '균형의 정치'에 필요한 원리와 규범, 제도를 구상하는 데 중요한 이념적 자원이 될 수 있다.

4. 다문화주의 정치: 이질성의 포용과 다양성의 통합

통합은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구성을 전제로 한다. 이질성과 다양성을 부정하는 동화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담론의 중심주제 중의 하나인 다원주의적 통합은 주목의 대상이 될 만하다. 단일문화주의는 문화적 동질성과 중심 문화의 수립이 정치공동체 형성과 통합의 필수조건이라고 전제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이자 제도적 관행으로서의 단일문화주의는 동질성을 인간의 자연적 조건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동질성이 실현된 사회를 이상형의 사회로 개념화한다. 한 사회 내에서 단일문화주의가 강조되고 세력화되는 과정은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치공동체로서 근대 국가의 수립에 필요로 되는 조건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문화주의의 역사는 한편으로 문화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어 도구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일문화주의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중심화와 주변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동화와 통합을 둘러싼 한 국가 내의 집단적 갈등과 국가들 간의 대립을 수반하게 된다.

단일문화주의가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며, 헤게모니와 관련된 정치적 동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주의 담론의 등장도 기존의 단일문화주의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담론의 등장 배후에는 미국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앵글로 색슨의 획일적, 패권적 단일문화주의에 대한 비판, 60년대의 반문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영향,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에 따

큰 근대적 획일성/동질화에 대한 도전과 타자성에 대한 관심의 고조, 지구화에 따른 국제적 문화 교류의 활성화 등의 요인들이 존재한다. 다문화주의는 기존의 사회구성과 운영의 원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연결되어 권력과 헤게모니를 둘러싼 정치적 담론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다문화주의와 '차이의 정치(the politics of difference)' 담론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담론이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윤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한 사회의 문화 전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회의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문제와 직결된다. 문화는 역사적 축적을 통해 정치공동체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문화 담론의 기저에서 정치적 관심을 필연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한 예로 미국의 다문화주의자들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은 다문화주의적 주장의 득세가 사회 질서의 와해를 반영하는 현상이라는 그들의 정치적 판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보수주의자들에 따르면, 질서는 반드시 중심을 요구하며, 이 중심 원리에 따라 그리고 사회 각 부분이 중심세력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 질서와 통합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에 비판적인 다문화주의의 시각에서는 위계적 서열화와 우위성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특수한 맥락과 용도의 문제로 이해된다. 중심화와 주변화를 내포하는 문화 발전과정의 역동성은 권력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현실화된다. 따라서 현대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현대 사회의 변화하는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다문화주의 담론은 단일문화주의의 역사성과 한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의해 보수주의적 입장에 대한 비판이 보다 설득력을 확보하게 되고, 주변화된 타자에 대한 관심과 이질성의 긍정적 기능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대와 같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문화적 창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문화들에 대한 개방과 그들과의 교류가 요구된다. 그러나 보다 우선적인 과제는 자기정체성/동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즉, 자기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형성과정에 내적 다원성과 이질적 타자와의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반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다문화주의 담론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내부의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나의 정점을 가지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소용돌이(vortex)' 문화의 등장은 성숙한 문화적 기반의 와해를 의미한다. 동질성을 강조하는 단일문화주의는 인류 문화 발전의 역사적 경험에도 배치되며, 현대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설득력을 가지기도 어렵다. 단일성과 동질성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억압을 내포하며, 부자연스러운 인간 삶의 조건이다. 물론 이질성을 내포하는 다문화적 상황은 문화적 창조력의 중대라는 긍정적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 통합의 붕괴라는 위험성을 모두 내포한다. 그리고 이질성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은 보장 없는 부단한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전통이다. '전통의 합리성'은 바로 대내외적인 이질성의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현대 문화 담론의 관심은 '단일문화적 동화(monocultural assimilation)'로부터 '다문화적 통합(multicultural integration)'으로 전환되었으며, 한국 사회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물론 한국 사회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태의 다문화적 사회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 전통을 단일문화주의적으로 규정한다면 복잡화되는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 내의 다양성을 억압하기보다는 다원적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IV. 맺는 말

현실적 변화의 추세로서의 지구화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증후군을 포괄한다. 개인과 사회집단,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된 초국적 행위자들의 교류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급속히 증대되고, 정보혁명과 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행위자의 일상적 경험의 폭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상황들이 지구화의 추세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화 현상의 배후에는 주로 정치경제적 관점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현실적 동기와 함께 인류 보편의 세계시민적 가치와 문화의 형성이라는 이상성의 차원이 혼재한다. 또한 지구화의 추세는 탈산업화, 탈근대화, 지방화, 정보화 등의 추세들과 유기적 연관성

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으며, 동질화와 차별화, 보편화와 특수화의 상호작용적 메커니즘을 통해 전 세계지역을 수평 및 수직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구화의 추세는 남북한 통합의 과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한편으로 지구화는 민족국가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을 내포하면서, 동시에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특수주의와 국지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경향을 내포한다. 국가간 상호교류와 상호의존성의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방적 통합'을 지향한다면, 특수주의와 전통주의에 의존하는 '폐쇄적 통합'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의 문화수용과 문화변동의 양상을 보면 무분별한 개방과 다소 국수주의적인 선전이 혼합되어 빚어지는 혼란 상황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형성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의 결여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 산업화시대의 중앙집권적 정치경제에 토대를 둔 '민족' 및 '민족문화'의 전통적인 패러다임과 탈산업화와 정보화시대의 탈중심적, 탈영토적인 새로운 정체성과 문화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일적 '동화'가 아닌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부의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집중식의 통제방식과 문화로부터 탈피함으로써 이질적인 실제 구성요소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분권적인 방식과 제도를 추구해야 한다. 즉,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남북한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부의 다양성을 억압하기보다는 다원적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은 한반도의 정치공동체가 지향하는 사회 구성과 운영의 합리적 원리에 대한 진지한 공적 논의에서 찾아질 수 있다. 남북한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의 '합리적' 기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거대한 규모와 복합적인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세계에서 남북한이 어떠한 형태이든 내적 통합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대 세계의 객관적인 변화에 따른 내외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화와 협력을 가능케 하는 최소주의적 규범, 새로운 국민 정체성의 형성, 공화주의적 '기본구조' 수립의 원칙, 공동체적 유대와 시민윤리, 법치민주주의와 정당성, 다문화주의적 통합 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구갑우. 2007.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 김동성. 1995. 『한국민족주의 연구』. 서울: 오름.
- 김영자. 1989. 『한말대서널리즘 연구: 사상과 현실』. 서울: 청계연구소.
- 김혜승. 1997. 『한국 민족주의: 발생양식과 전개과정』. 서울: 비봉출판사.
- 박종철.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한반도 평화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 신용하. 1987. 『한국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홍림. 2002. “민족통합에 대한 철학적 접근.” 김용호·유재천 편. 『민족통합의 새로운 개념과 전략(상)』, 189-219. 춘천: 한림대학교출판부
- 이정복 외. 2000.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종석. 1998.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
- _____. 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 임현진·정영철. 2005.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 민. 200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 조성열. 20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 맵』. 서울: 통일연구원.
- Finer, Samuel E. 1997. *The History of Government*, Vol. I. Oxford: Oxford Univ. Press.
- Habermas, Jürgen.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ambridge: The MIT Press.
- Honohan, Isueult. 2002. *Civic Republicanism*. London: Routledge.
- Hutchinson, John, and Anthony D. Smith, eds. 2000. *Nationalism*, Vols. I-IV. New York: Routledge.
- Motyl, Alexander J., ed. 2001. *Encyclopedia of Nationalism*, Vol. I: Fundamental Themes. San Diego: Academic Press.
- Pettit, Philip. 1997.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awls, John. 1999.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kinner, Quentin. 1998. *Liberty before Liber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iroli, Maurizio. 2002. *Republicanism*. New York: Hill and Wang.
- Yack, Bernald. 2001. “Popular Sovereignty and Nationalism.” *Political Theory* 29, No. 4, 517-536.

ABSTRACT**Ideological Resources for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Honglim Ryu**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as a complicated process involves manifold issues and concerns: political legitimacy should be ascertained through rational justification in public, the prospects of mutual economic benefits need to be shared, and the efforts to build up a new national identity cannot be neglected. Moreover, it requires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arrangements for dealing with both conflicts of interest and discords of cultural traits. In order to come up with more relevant and plausible ways of settling rather permanent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on as a process,' which includes exchanges of many kinds, cooperation in diverse areas, peace agreement, and finally political unification.

Ideological and theoretical resources for facilitating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can be provided by examining the contemporary discourses on political and socio-cultural integration. Rather than formulating a monolithic ideological scheme for unification, this paper attempts to articulate some of constitutional essentials which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It thus focuses up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minimalist ethics in justifying basic rights, nationalism as a normative basis of mutual trust and solidarity, the structural principles of democratic republicanism,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By discussing these theoretical trends, we can have a better grasp of what are at stake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Keywords: integration, unification, minimalist ethics, nationalism, democratic republicanism,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